

국내 보험사, BMW에 구상권 청구소송 검토

보험사 해외車 브랜드에 첫 소송
3년 전 20건 이상 화재사고
포함하면 청구소송액 커질 듯

보험사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논의 중이다. 일반 청구 절차보다는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내 보험업계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BMW코리아가 사고 원인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면서 구상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년 전 BMW코리아가 '원인불명'으로 결론을 내던 화재 사고까지 포함된다면 구상권 청구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국내 보험사가 BMW코리아를 상대로 구상권 청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MW 코리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 청구는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다. 쉽게 말해 갚을 돈을 갚았다고 대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

고 가 날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보장을 해주고 이후 보험사가 대신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올해 국내 BMW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32건이다. 이 중 대표 모

델인 520d 차종이 19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자기차량) 보험에 가입된 고객에 한해 보험금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6일 BMW코리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화재사고 원인을 밝히자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BMW코리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RG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온 것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공개하고 리콜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기술 결함 등 원인 증명이 어려워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차적으로 화재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는 보험사가 보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은 차에 문제

가 있었던 것인 데다 제조사(BMW)가 결함을 인정한 만큼 제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BMW 화재사고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20건 이상 발생했다. 당시 BMW코리아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제조사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화재사고 건 외에 과거 건까지 확인해 구상권 청구 소송에 포함할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 경우 청구 소송액의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화재사고의 보상 데이터를 분석해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중"이라며 "제조사의 결함 인정 범위에 따라 소송 규모, 소송 방법 등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한계 드러낸 리콜제도...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국토부 "현행 3배 피해보상 보다 더욱 무거운 배상제도 방안 추진"
결함 은폐면 매출액 1% 과징금

정부가 BMW 차량의 화재 사태를 계기로 리콜제도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리콜제도 안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계획을 세우는 등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이 BMW측에 차량화재관련 조치를 요구한 뒤 목포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한 BMW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왼쪽)를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

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피해의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 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

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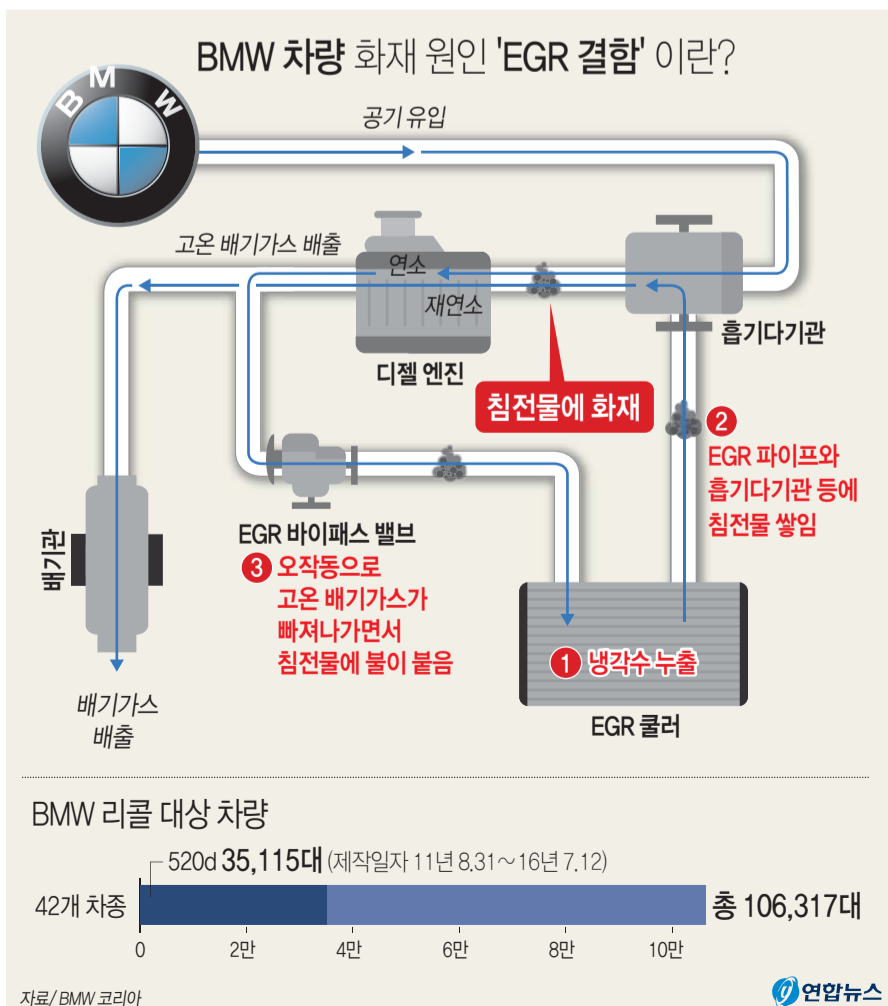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로도 이어졌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6일 30여차례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체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분석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미흡해 이번 BMW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연우 기자 yw964@



BMW 차량 화재 논란... 고객 악용하지 말아야

기지 수첩
양성운 (산입부)

김효준 BMW코리아대표는 지난 6일 최근 연속된 차량 화재와 관련해 대국민 공개 사과까지 나섰다. 김 대표는 "화재 사고를 겪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고객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BMW코리아는 BMW 본사 차량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프로젝트팀 10명을 투입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데 고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차량 결함은 물론 사고유무, 연식, 주행거리 등과 관계없이 신형 520d 차량 값으로 환불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BMW 서비스센터가 리콜로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고객과 서비스센터 직원간의

실감이 이어지면서 차량 점검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최초 차량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를 감지했지만 안일한 대처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던 BMW의 잘못이 가장 크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근 목포에서 발생한 520d 차량 화재의 원인은 어떤 부품의 문제인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차량 결함으로 소비자가 겪을 불편함과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 BMW코리아는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소비자들은 올바른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 ysw@